



도시계획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 관려부처 간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도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였으나 생태자연도 작성작업이 끝나는 2003년 이후부터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생태계의 더 정확한 분포상황을 기입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사고 대비 국가방제기본계획수립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12일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방제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1월 해경청이 가입한 ‘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 협약)의 국내 발효시기(2000.2.9)에 맞춰 수립된 것으로 과거 해경청 중심의 방제체계를 정부의 각 부처가 총동원되는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계획은 ▲ 국가방제조직 및 지휘체계 ▲ 국제협력체계 ▲ 방제방법 선택 및 실행 ▲ 어장과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구 등 방제조치에서부터 사고현장의 사후 관리까지 해양오염사고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각 관련 부처의 임무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형 기름오염사고 발생시 국가의 모든 방제역량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국에 14개 자연생태관찰시설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환경부는 무주, 남해, 경기도 의왕, 대구 등 전국 14개

지역에 특정생태계를 모아 보존하는 자연생태관찰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여가생활과 관광자원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내에 반딧불이 학습장 등 14개의 생태관찰시설 설치사업에 모두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관찰시설은 자연학습공원, 자연생태공원, 나비생태공원, 자생식물원 등 지역이나 생태계에 따라 다양하게 꾸며진다.

특히 남해에는 나비생태공원이, 무주에는 반딧불이 자연학교가 각각 들어선다.

또 전남 함평에는 곤충만을 모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생태관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 목포에는 인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모은 자생식물원이, 강원도 양구에도 산악 및 해양지대에서 채취한 것들을 모은 생태식물원이 각각 설치될 계획이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이 밖에도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 경북 문경새재, 부산 을숙도, 울산 태화강, 제주 서귀포, 천지연 등 보전할만한 가치가 높은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학습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연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동·식물, 곤충 등 생태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 무분별한 개발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억제할 수 있는 지도인 ‘자연생태계’를 작성해 국토개발계획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